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최신 전황

2~3면

시온주의와
제국주의

4~5면

국제앰네스티와
한국 정부의
평화주의

6~7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기운
노동자 정당들

12면

대법원,
노동시간 유연화
인정 판결

16면



왜 두 국가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는가

8~9면

1월 13일(토)

팔레스타인의 연대 국제 행동의 날



[종합]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최신 전황

기아·질병·폭격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퍼붓는 무기들

찰리 김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미사일·폭탄·포탄·총알을 퍼붓는 동시에 그들을 기아와 질병으로 괴롭히는 정책을 더한층 강화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는 12월 29일 'X(옛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가자지구 남부 전역에 피란민이 계속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몇몇 가족들은 여러 차례 거처를 옮겨야 했으며, 많은 사람이 수용 한계를 넘는 의료 시설에 피란해 있다. 나와 WHO 동료들은 전염병 위험 증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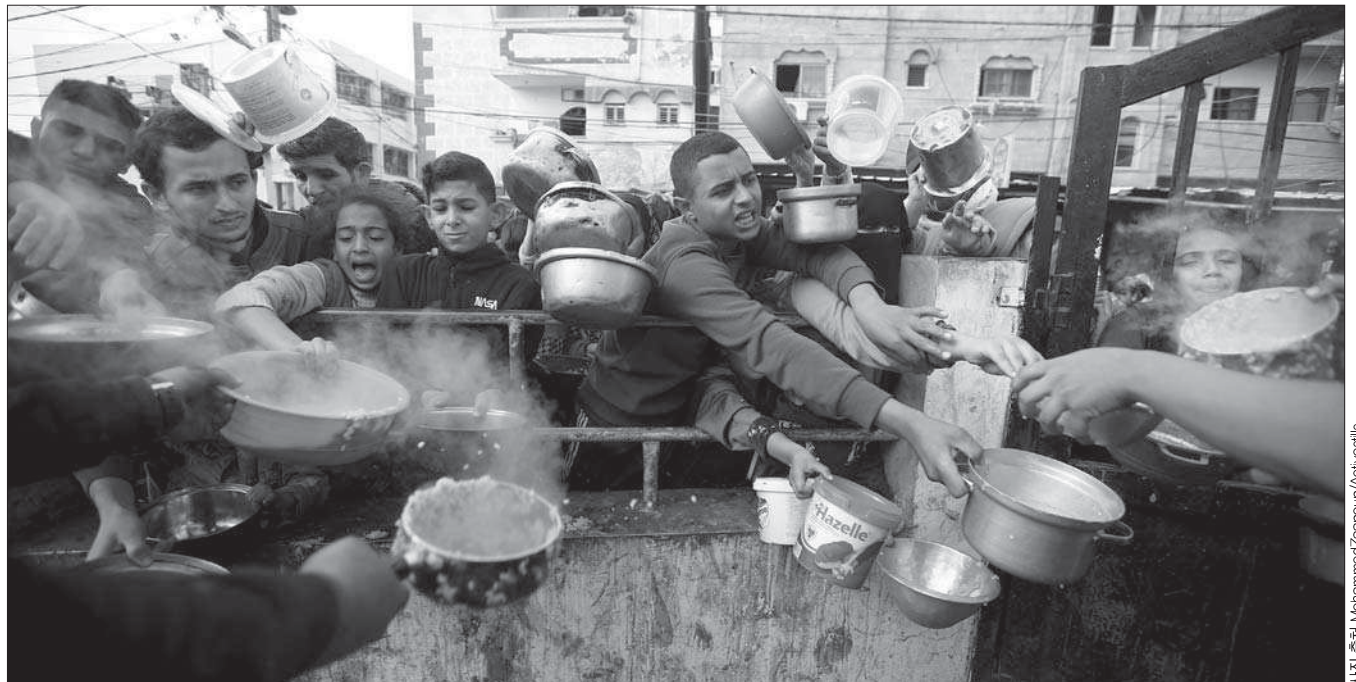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대피소 피란민 중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거브러여수스는 “약 18만 명이 상기도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설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13만 6400명이나 된다. 그중 절반은 5세 미만 아동이다. 뇌막염 환자도 126명이나 된다” 하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고의로 조장하는 기아와 영양실조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UNRWA)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40퍼센트가 “기근 위험 상태”다. 유엔은 “[세계식량위기보고서의 분류 기준에 따른] 심각한 식량 불안 상태가 ‘재앙 임계점’인 5단계를 넘어섰다는 명백한 증거에 따라” 가자지구에 기아조사위원회를 파견했다.

UNRWA는 이번 주에 분노에 찬 성명을 발표했다. “전쟁 첫 두 주 동안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를 물살틈없이 포위하고 식량·물·의약품·연료 등 물자 반입을 일절 금지했다.

“첫 번째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은 10월 21일에 허용됐다. 이 물자들은 복잡하고 긴 검사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를 위해 물자를 실은 트럭이 이스라엘 영토를 거치게끔 경로를 변경하기도 해야 했다. 그 이후, 라파 검문소를 거쳐 이집트에서 반입되는 트럭들이 조금 늘긴 했지만, 당면한 심각한 인도적 필요에 견주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동시에, 폭격과 포격은 전혀 누그러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의 40퍼센트가 “기근 위험 상태”다

지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가지 난민촌에서 벌어진 학살은 너무도 그 의도가 분명해서 한 이스라엘군 장교는 사망자가 많았던 것이 “부적절한 무기”를 사용한 결과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난민촌에서 파괴적 파편을 뿌리는 무기 중 과연 어떤 것이 적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설명은 없었다. 해당 장교는 이스라엘군이 “이 사건에서 교훈을 배우려 노력” 중이라고 이스라엘 공영 방송 ‘칸’에 전했다.

이것이 역겨운 거짓말이라는 점은,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폭탄이 누세이라트 난민촌과 마가지 난민촌에서 최소 35명을 살해했을 때 드러났다. 이스라엘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있는 것은 저항을 박멸하고 인종 청소를 자행한다는 인종 학살 전략의 일환이다.

12월 마지막 주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 마제드 밤야는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려 하고 그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른바 ‘자발적 이주’ — 강제 이주의 코드명입니다 — 시키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파괴당하느냐 쫓겨나느냐, 죽느냐 쫓겨나느냐.”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로 학살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비상 조치 통해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155밀리미터 포탄 및 관련 장비를 의회의 검토 없이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29일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블링컨은 의회 검토라는 요건을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즉시 무기를 판매해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 살해를 최소화하라는 미국

의 “압박”이 공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번에 판매한 무기는 1억 5000만 달러어치에 이른다.

바이든 정부가 의회 검토를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이것으로 12월에만 두 번째이다. 12월 9일에도 바이든 정부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발동해 이스라엘에 탱크용 포탄 약 1만 4000발 판매를 허가했다.

사진 출처: Mohammed Zahran/Activestills

사진 출처: IDF

[종합]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최신 전황



새해 첫날 서안지구 라말라에서 열린 연대 집회. 팔레스타인인들은 굴복하지 않고 있다

국제법의 실패

12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국제 '제노사이드(인종 학살) 협약' 위반 혐의를 들어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남아공 정부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고 거주민을 강제 소거해 현재 민간인들이 겪는 고초를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남아공은 다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아주 시급하게"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협약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관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선언하라고 말이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체면을 구길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 없는 조치들이다. 1년 전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동예루살렘·가자지구 점령의 법적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표결했다. 하지만 이후 시온주의 억압을 중단시킬 조치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서안·가자지구에서 인권 실태 조사를 2021년 3월 개시했다. 해당 조사의 책임을 맡은 영국인 변호사 카림 칸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비호해 왔다.

11월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를 호소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연합체] '팔레스타인 BDS' 전국위원회는 카림 칸이 인종

학살이 벌어지도록 공모했다고 규탄했다. 칸이 학살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도 않고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성명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04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대규모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불법이고 건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장벽 건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 2004년 권고의견은 팔레스타인 현지에서 거의 아무 효력도 없었다. 이는 유엔 기구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한다는 권고를 전했지만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들이 일축했던 술한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꺾이지 않은 하마스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들은 이스라엘과 그 서방 후원자들에 맞서 군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 사례로, 저항 세력들은 다음과 같은 전과를 올렸다고 12월 29일 발표했다.

-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부레이 난민촌 북쪽에서 이스라엘군 보병 부대와 군용 차량 여러 대를 상대로 폭탄 네 개와 대인지뢰 하나로 이뤄진 복합 지뢰를 폭발시켜 사상자를 다수 발생시킴
- 부레이 난민촌 북부에서 D9 군용 불도저를 겨냥해 대전차로켓 알-야신105 발포, 타격함
- 부레이 난민촌 북부에서 건물에 은신 중이던 이스라엘군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 발사 후 교전, 적진에서 사상자 다수 발생
-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하눈에서 경찰 임무 수행 중이던 이스라엘군 무인정찰기 스카이라크-2 1기 격추
-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대전차로켓 알-야신105로 이스라엘군 전차 메르카바 2대 파괴
-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동쪽에서 이스라엘군 차량 편대와 병사들을 향해 박격포 발사
- 가자시티 동쪽 알샤아프, 자발 알라예스 지역에서 이스라엘군과 격전, 이스라엘군 보병 부대 사이에서 대인 장비를 폭발시켰고 건물에 은신 중이던 이스라엘군 부대를 향해 TBG 포탄을 발사해 적군에서 대규모 사상자 발생
- 가자시티 내 알투파·알다라지 구역에서 이스라엘군 병사·차량을 공격
-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 다수의 로켓 포탄 발사

출처 Charlie Kimber, 'Starvation, disease and bombs are Israel's weapons in Gaza' (2023. 12. 30) / 번역 김준호

16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즉각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1월 6일(토) 오후 2시 | 서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bit.ly/people-freepalestine

문의 010-7550-2131 people.freepalestine@gmail.com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도심 행진



함께합시다! 1.13 국제 행동의 날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후원 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백은진)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개최를 위해 사용됩니다.

태생부터 제국주의에 찰싹 붙은 시온주의

(그리고 이스라엘)

김인식

두루 알다시피, 이스라엘 국가는 제국주의가 지원하지 않았다면 건국될 수 없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을 건국 과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확고하게 지원하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 484호에 실린 '8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편든 미국'을 보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등 서방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이는 전쟁은 제국주의적 전쟁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팔레스타인인의 저항과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근저에는 급진적 반(反)제국주의 잠재력이 있다.(본지 485호에 실린 '이렇게 생각한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부상과 본지 지지자의 참가 필요'를 보시오.)

따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제국주의와 분리시켜서는 파악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언제부터, 어떻게 현재처럼 조직됐을까? 이를 알려면 이스라엘 건국을 이끈 시온주의 운동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봐야 한다.

리손레지온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정착촌을 처음 건설한 것은 시온주의자들이 아니었다. 에드몽 드 로실드(로스차일드) 남작이 지원한 프랑스 단체 국제유대인 연합(Alliance Israelite Universelle)이었다.

국제유대인연합은 1882년 텔아비브 남동쪽에 소재한 리손레지온 농장에



1947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유대인들

유대인을 이주시켰다.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세계 시온주의자 총회가 열리기 15년 전이었다.

로실드는 1930년대 후반까지 시온주의에 적대적이었다. 그는 시온주의자들의 유대인만의 국가 수립 사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로실드는 차르 치하 러시아에서 자행된 대학살(포그롬)을 피해 도망 온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제공해,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 알제리처럼 만들고자 했다.

로실드는 프랑스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해외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온주의 운동은 유대인 이민자들이 팔레스타인에 오기 전부터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만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 거주 아

랍인의 반발을 의식해 그 목표를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한 ‘고국’을 건설한다”는 식으로 예뉘러 말했다.

시온주의자들은 그런 목표를 이룰 방법이 있어야 했다. 시온주의의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대외 정책이 필요했다.

19세기 후반 시온주의자들의 활동은 모두 유럽에서 이뤄졌다. 시온주의는 유럽에서 생겨난 유럽적 현상이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인구는 그곳 아랍인의 10퍼센트도 안 됐다.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은 시온주의 운동과 아무 관계도 없었다.

그래서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만의 국가 수립 계획을 제국주의 열강한테서 승인받고자 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아랍인이 70만 명이나 살고 있었지만, 시온주의자들은 그들과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독립을 염원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유대인만의 국가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가 그랬듯이, 19세기 유럽 민족주의의 영향하에 형성된 시온주의도 식민지 토착민을 정치 주체로 감안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온주의의 정치적·외교적 노력은 전적으로 기성 제국주의 열강을 상대로 이뤄졌다.

세계시온주의기구의 공동 창립자 막스 노르다우는 이렇게 말했다.

“팔레스타인을 향한 우리의 염원은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 같은 것이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열강에 맞게 우리의 태도를 정해야 한다.”

그래서 시온주의 지도자 테오도어 헤르츨은 처음에는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제국의 술탄과 그 우방인 독일의 카이저를 설득하려 했다.

제1차세계대전을 거치며 그 대상은 영국으로 바뀌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다음 지배국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1917년 11월 2일 뵐푸어 선언을 발표해 시온주의자들에게 지지를 표했다.

이렇듯 시온주의는 초기부터 친제국주의 지향성이 그 목표에 내재돼 있었다. 팔레스타인의 지배자가 시온주의의 계획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36년 반란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만의 국가를 수립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했다.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에 대거 이주시키고,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대량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제1차세계대전의 충격 속에서 정치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온주의자들의 이민·토지 정책을 반대했다. 그리고 시온주의의 목표도 분명하게 반대하며 정치적 독립을 염원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지배자들을 물리치고자 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이 다수를 차



1936~39년 반란을 일으킨 팔레스타인인들



사진: 뉴욕타임스

이스라엘은 중동에 걸린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경비견 구실을 한다. 비록 가끔 리드줄을 당기며 날뛰지만 말이다

지하기 전에 아랍 민족 운동이 독립을 성취하게 된다면 시온주의의 핵심 목표가 좌절될 터였다.

그래서 시온주의자들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지배를 지지했다. 영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가 자신들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1936~39년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때때로 영국 군대의 50퍼센트가 그 반란에 묶이곤 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결국 패배했고 무장 해제됐다. 영국과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의 정치 무대를 차지했다.

제2차세계대전 말경 영국과 시온주의자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영국이 유럽 유대인의 대량 이주를 막은 게 핵심 이유였다. 그리하여 양측은 1945~1947년 무장 충돌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시온주의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시온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로 제국주의 질서에 변화가 생긴 틈(영국 제국주의가 약화된 반면 미국 제국주의가 강화되는)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었다. 이제 시온주의자들은 미국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나치의 600만 유대인 학살로 인해 세계 여론이 시온주의자들에게 우호적이었고, 영국의 패배를 바라며 종종 추축국을 적극 지지했던 아랍 민족주의가 사기 저하된 덕분에 시온주의자들은 이 투쟁에서 승리했다.

결국 1947년 11월 27일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 영토를 유대인 지구와 아랍인 지구로 분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랍 국가들이 이에 반발해 제1차 중동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벤구리온(이스라엘 초대 총리)과 압둘라(요르단 국왕)가 전쟁 도중에 비밀리에 협상해 유엔이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에게 할당한 영토를 각각 합병했다.

그리하여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독립 국가를 수립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국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희생시키고 합병한 영토를 세계 열강과 국제 기구로부터 승인받으려 했다.

당시 소련은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정치적·군사적으로 확고하게 지지했다. 그러나 시온주의자들은 유대계 미국인 부자들과 미국 정부와의 경제적·정치적 연계를 더 선호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을 공개 지지했다.

팔레스타인에서 미국의 지지를 받은 답례로 시온주의자들은 미국 주도의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한 것이다.

한편, 독립 열망이 짙바하고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거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 대다수 팔레스타인인들은 결코 시온주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

시온주의자들이 오직 무력으로만 팔레스타인인을 억누를 수 있었다는 점은 전혀 놀랍지 않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랍 지배자들과 언제 어느 곳에서든 협상해 기꺼이

화의를 맺고자 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치적 비존재 취급을 했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카타르가 중재해) 하마스와 인질 교환 협상을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견디기 힘든 수도였을 것이다.

종속국

시온주의가 제국주의에 달라붙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순전히 미국의 종속국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반대했는데도 1956년 수에즈 전쟁을 일으켰다.

또, 1967년 6월 당시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티란 해협을 봉쇄했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개입 요청을 거부했다. 미국은 그 무렵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편들어 아랍 세계 전체와 적대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미군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한 뒤에야 존슨은 전투 가능성을 승인했다.

결국 미국은 나세르가 주도한 아랍 민족주의 운동을 견제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동원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지원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미국과 (전술적 차이로) 의견 충돌을 해가면서도 팔레스타인인을 인종 학살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는 자국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대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이스라엘 국가의 창건 방식과 존립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국주의 시스템의 필수적 일부일 것이다.

특히, 팔레스타인에 시온주의 정책을 강요하려면 제국주의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 팔레스타인 저항의 쟁점들을 다룬 노동자연대 TV 영상 모음

온라인 토론회 영상,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영상들을 만나 보세요!



bit.ly/477esMy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절판)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라시드 할라디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448쪽, 25,000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하마스 규탄 국회 결의안' 환영, 오류이다

성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12월 8일 국회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이 결의안은 하마스 규탄을 강조함으로써 현재의 비극이 사실상 하마스의 잔인한 공격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한다.(관련 기사: 본지 486호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앞서 11월 2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을 대표한 참여연대와 함께 김상희(민주당)·배진교(정의당) 의원과 왈리드 시암 주일 팔레스타인 대사의 만남을 주선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애초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도 분명한 이스라엘 규탄 입장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조차 국회 논의를 거치며 더 후퇴했다.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의 발의안과 병합되며 하마스 규탄이 더 부각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즉각 휴전' 촉구가 빠지고 '인도적 휴전'으로 바

뀌었다.

그래서 최종 결의안은 미국의 입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됐다. 하태경 의원은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을 발의할 정도로 이스라엘 편이다.

김상희 의원의 결의안 발의를 중시하던 참여연대도 국회 결의안 통과에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한민국 국회가 외교부와 달리 휴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고 포장한 것이다.

휴전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는 10월 말부터 "즉각 휴전"을 요구해 왔다. 한국지부는 한국 정부가 '하마스 규탄이 없다'는 이유로 유엔 총회의 휴전 결의안에 기권한 것도 비판했었다. 이번 국회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 것도 휴전 촉구가 포함됐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휴전 요구는 이스라엘더러 공격을 멈추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하마스더러 저항을 멈추라고 압박하는 뜻도 된다. 이번 국회 결의안은 후자를 더 강조했다.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평화주의의 양면성

국제앰네스티는 2022년 2월 이스라엘을 '아파트헤이트 국가'로 옳게 규정하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948년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 지도자들이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대량 추방하고 수백 개의 마을을 파괴했으며, 이는 인종 청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그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억압 정책, 법률, 관행 등을 1948년부터 현재까지 추적한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발적인 범죄의 반복이 아니라 제도화된 체제의 일부"라고 옳게 규정한다.

이는 팔레스타인 운동과 좌파에게 꽤 오래 전부터 명료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만행이 계속되면서 국제앰네스티 등 주류 인권단체들도 최근 이 견해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반영하는 좋은 일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이 보고서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요약 번역해 게시했고, '이스라엘의 아파트헤이트 즉각 종식' 온라인 서명을 벌였었다. 또, 지난

12월 6일 한국지부가 주최한 '긴급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의 제목은 "휴전을 넘어, 이스라엘의 '아파트헤이트' 종식으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아파트헤이트 종식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국제 사회," 즉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각국 국제앰네스티의 관련 주요 활동은 휴전을 지지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11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교전 일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네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큰 의의를 부여하며 이렇게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마침내 평화와 안보 유지, 국제 법치 보호라는 주어진 역할과 리더십을 행사했다. ... 찬성이 아니라 기권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날 준비가 돼 있다는 변화의 첫 번째 신호를 보여 주었다."

▶ 7면으로 이어짐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paper.org



wsp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paper.org

@wsppaper
노동자 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발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제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paper.org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 우익의 위기감을 반영하다

오늘(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며 대항전망대를 찾아 발언하던 중이었다. 범인은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목 부위를 찔렀다. 범인은 신원 미상의 6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본지는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반대하면서도) 좌파적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노선을 비판해 왔다. 최근 이 대표는 이낙연 신당 등으로 압박을 가해 오는 당내 보수파와 타협하는 행보를 자주 보였다.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과 아래로부

터의 대중 투쟁을 강조하는 본지 방침에 비추어 이런 개별적 테러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이번 테러는 우익적 보복·위협 행위인 듯하다. 최근 우익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위기가 여전히 깊은 가운데, 그 대항마로 떠오른 이재명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익 테러에 (물리적 또는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아서 안 된다. 그는 그에게 희망을 거는 개혁 염원 대중의 대중 투쟁에 의해 검증 받아야 한다.

김승주



피습으로 쓰러진 이재명 대표

▶ 6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일시적 교전 중단이 며칠에 될지, 몇 주나 몇 달이 될지를 두고 빚어지는 양국간 의견 차이는 전혀 본질적이지 않다.

“국제 사회”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질서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국제법을 간단히 무시하고 폭력으로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유엔 같은 국제기구 개입은 팔레스타인에 무용하거나 심지어 해로웠다.

가령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사장 카림 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범죄를 조사한다며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 측 피해자를 만났다. 하지만 가자지구 방문하지도, 독자적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설사 ICC에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전쟁 범죄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효과도 별로 없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서안지구에 이스라엘이 세운 분리장벽이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ICJ는 국제법에 따라 국가간 분쟁만을 재판한다.)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이런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아래와 같이 그들에게 달리 대안이 없는 듯하다.

“완전히 좌절스러운 상황입니다. ‘대관절 국제법이 있어도 범죄를 자행하

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제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권한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한국지부 주최 ‘긴급 웨비나’에서 발제자 중 하나인 부두르 하산 조사관)

위선에 속을 우려

“국제 사회”에 기대는 평화주의가 단지 무용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위기가 첨예할수록 제국주의적 강대국들의 위선에 포섭될 위험도 커진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국회 결의안 환영이 그 사례다.

국제앰네스티와 그 한국지부는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옳게 규정하면서도, “민간인 보호”라는 기준에 따라, 이런 규정을 사장시켜 버린 채 (아래와 같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규탄한다.

“최근 분쟁의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있다. 그러나 10월 7일 하마스와 다른 무장 단체가 자행한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을 이것으로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11월 29일, ‘공개된 권리: 인권과 무력충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제앰네스티 요구 중에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휴전”과, 하마스와 다른 무장 단체들에게 “민간인 인질들을 조건 없



유례없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부상 이 운동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즉시 석방”할 것도 포함된다.

물론 민간인 공격이 미덕은 아니다. 하지만 앰네스티 입장은 민간인 희생과 인질 억류가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저항의 불가피한 결과임을 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퍼붓고 인질이 최소한의 구호 물품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을 교환하는 수단이 되는 상황에서(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이 만든 것이다) 앰네스티 요구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말리는 것이 된다.

무엇보다 앰네스티 같은 입장은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 팔레스타인인과 중동 피억압 대중에게 이스라엘

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유례없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촉발한 정치적 의의를 무시한다.

“국제 사회”(사실상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주도한다)를 설득해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종식시키자는 입장이다 보니 하마스의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이 문제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국회 결의안을 환영한 것은 “국제 사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설득하려 드는 평화주의가 구체적 상황에서는 피억압자들에게 불리하게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의 봉쇄와 통제, 침탈 속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주어진 땅에 진정한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2023년 5월 가자지구 장벽에서 시위를 벌이는 팔레스타인인들

왜 두 국가 방안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이원웅

두 국가 방안은 이스라엘과 나란히 공존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를 세워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이것은 1948년의 강탈로 건국된 이스라엘을 일단 인정하고,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통해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일부에 (즉, 1967년 전쟁 전에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있지 않았던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를 영토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기습과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로 두 국가 방안은 지극히 가망 없는 제안으로 보이게 됐다.

그러나 이미 전쟁 훨씬 전에도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인 다수에게서 기대를 잃은 상태였다. 지난해 9월 팔레스타인정책조사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그 방안을 지지한 팔레스타인인은 32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미국과 서방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두 국가 방안을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법으로 지지한다. 이는 유엔 결의 등으로 거듭 표현되는 ‘국제 사회’의 입장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 방어 운동의 일부도 두 국가 방안에 기대를 걸거나, 대안이 딱히 없는 가운데 그나마 현실성 있는 대

안 또는 일단은 당면 상황의 개선안으로 여긴다.

예전대 12월 초 참여연대는 팔레스타인에서 ‘올리브나무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윤희 고양 YMCA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그 인터뷰에서 이윤희 씨는 오슬로 협정과 그 이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상세히 다루면서도 결국 “두 국가안 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결론 내린다.

신기루

그러나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 새로 신기루를 쫓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느 정치 세력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진정한 국가를 허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강탈해 세워진 국

가이기 때문이다.

시온주의자들은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하려고 나크바 ‘대재앙’을 일으켰지만, 모든 팔레스타인들을 내쫓지는 못했다. 난민이 된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도 이스라엘 땅이 된 고향의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곳에 가 본 적 없는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온주의자들이 배타적 유대인 국가라는 본질을 유지하려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끊임없이 적대적이어야 한다. 시온주의자들이 보기에,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일부(그것이 겨우 22퍼센트에 불과한데도)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허용하는 것은 적대자들에게 발판을 내주는 것으로, 시온주의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두 국가 방안이 제안된 맥락과 ‘평화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궤

적을 보면, 그 방안이 전제하는 점진적인 수단이 그 방안이 제시하는 목표(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의 건설)조차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정치적 후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애초 목표는 이스라엘 국가를 단일한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로 대체해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이끈 파타 지도자들은 그러한 목표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이런 변화는 파타의 전략이 낡은 패배와 관련 있었다. 파타의 전략은 게릴라전을 하면서 아랍 국가들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었다. 파타는 이를 위해 다른 아랍 나라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이 그 나라 정권에 도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한사코 피하려 했다.

1970년 요르단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PLO는 머뭇거리다가 요르단 왕의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받고 레바논으로 쫓겨났다. 그 후 레바논에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다.

한편, 파타가 의존하려 했던 아랍 국가들은 잇따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배했다.

그러면서 파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국가 구조를 해체한다는 목표를 거두어들이고, 미국·이스라엘과의 흥정



2023년 2월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주택이 철거되는 모습



진영조 기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대표적 구호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독립”
유대인 배척 구호 아니다

으로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얻어내 ‘소국가’를 세우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것은 1974년에 사실상 PLO의 정책이 됐다.

처음에 ‘소국가’ 노선은 팔레스타인 전체의 해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제시됐다. 그러나 그 노선은 PLO가 활동가들의 대중 운동에서 멀어지고 중동 외교의 한 요소가 되는 데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서 ‘소국가’는 그 자체로 목표가 됐다.

이는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제국주의에 맞서지 않고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노선으로 전환한 것과도 맞닿아 있었다.

물론 PLO가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고 1993년 오슬로 협정을 체결한 것은 단지 PLO가 후퇴한 결과만은 아니었다. PLO가 1974년 이래 제안한 평화 제안들을 이스라엘이 줄곧 무시해왔다. 사실 PLO가 패배하고 약화될수록 이스라엘은 그 제안을 수용할 이유가 없었다.

인티파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1987년 인티파다였다. 물론 팔레스타인인들의 취약한 처지 때문에 인티파다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인티파다는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끈질긴 저항이라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인티파다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지배를 뒤흔들 기폭제가 될 잠재력을 보여줬다. 중동 곳곳에서 일어난 연대 시위는 미국에 협력하는 정권들을 위협할 잠재력이 있었다. 이집트에서는 그런 운동이 전국적 수준으로 발전했다.

냉전에서 막 승리한 미국은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굳히기 위해 아랍 정권들과 자신의 핵심 동맹국 이스라엘의 관계를 관리하려 했다. 그러려면 그 관계를 압박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쟁을 적절히 제어할 세력이 필요했다.

PLO가 바로 그런 세력이었다. PLO는 자신이 추구하는 ‘소국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꽤 많은 것을 양보할 태세가 돼 있었다.

그렇게 해서 체결된 오슬로 협정(1993)은 엄밀히 따지면 협상을 위한 협상이었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과 난민 귀환 같은 핵심 문제들은 그 협정에 기초한 ‘평화 프로세스’에 따른 최종 협상에서 결정할 문제로 미뤄졌다.

PLO 측 협상가들은 이런 사안들을 최종 협상 의제로 올린 것 자체가 성과라고 자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화 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자신의 지배를 최대한 기정사실화해서, 협상이 이뤄질 즈음이면 그다지 협상할 것이 남아 있지 않게 하려 했다.

‘평화 프로세스’의 매 단계는 시한을

넘겼다. 최종 협상 이전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의 권한과 규모, 점령지의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 등을 둘러싸고 협상이 질질 끌었기 때문이다.

1967년 전쟁 이후부터 시작된 정착촌 건설이 이스라엘의 통제력을 기정사실화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 정착촌은 다른 아랍 지역을 위협하거나 핵심 자원과 통로를 통제하기 좋은 곳에 지어졌다. 정착촌 일대와 그곳들을 잇는 도로는 이스라엘이 통제했다.

오슬로 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 노동당 총리 라빈은 정착촌 문제가 최종 협상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리쿠드당이든 노동당이든 이스라엘의 모든 주요 정치 세력들은 팔레스타인 측이 국민국가의 실질적 구성 요소가 되도록 허용할 생각이 없었다.

서안지구와 예루살렘에 침투한 정착촌은 영토의 연속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상비군을 둘 수 없었고 오로지 내부 치안을 위한 경찰만을 둘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철수한 지역에서 거둔 세금 관련 기록을 모두 없애 버리기도 했다.

오슬로 협정 체결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이 설정되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의 자유는 오히려 크게 열악해졌다. 이스라엘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열악하게 된 팔레스타인인들의 경계를 더 악화시켰다.

소수의 파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위치에서 오는 특권을 이용해 부를 쌓았다. 하지만 대다수 팔레스타인인의 삶은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더 악화됐다.

악화

이에 대한 반발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벌어지면 이를 진압하는 것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몫이 됐다.

결국 최종 지위 협상에 해당하는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은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라파트조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밀었다.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전용 도로 등으로 난도질돼 있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예루살렘의 지위나 난민 문제에 관한 제안을 더 분명히 하라는 아라파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그후에도 두 국가 방안에 기초한 협상은 계속됐다. 나중에는 평화 프로세스의 틀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교체를 위한 선거가 열렸지만, 2006년 그

정권이 하마스로 교체되자 이스라엘과 서방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즈음 하마스는 “이스라엘 국가 구조의 파괴”라는 초기 강령을 희석시키고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일단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서방이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하마스가 저항을 포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서방에 ‘평화 프로세스’는 팔레스타인 측이 저항을 포기하고 스스로 단속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보여 준다.

지금의 현실

이런 두 국가 방안의 논리에 비춰 볼 때 지금 팔레스타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편으로, 2021년 역사적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일어난 항쟁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끈질긴 저항을 여전히 꺾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정치에서 극우가 득세했다. 이는 강탈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기초해 정착자들이 뭉치는 식민 정착자 사회의 특징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중동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중동 지역의 제국주의 경비견으로서 이스라엘이 더 중요해졌다. 게다가 극심한 생계비 위기와 경제 위기로 친미 아랍 정권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현재 미국이 두 국가 ‘해법’을 촉구하는 것은 시온주의 프로젝트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중동의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훨씬 첨예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무력하게 만들 뿐이다.

애초에 두 국가 방안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정의로운 해결책일 수가 없었다. 특히, 두 국가 방안은 주변국에 흩어진 훨씬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나,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미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수많은 정착촌이 깊숙이 침투한 현실에서 그곳에 독립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몽상일 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대안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애초 목표대로 시온주의 국가를 단일한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로 대체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만만찮은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정의로운 해법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다음 기회에 다루겠다.



서평 | 《아! 팔레스타인 1·2》

팔레스타인 문제의 어제와 오늘을 만화로 풀다

김영익

《아! 팔레스타인》은 원혜진 작가가 <오마 이뉴스>에 연재한 만화를 모아 2013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한 책이다. 2023년 2월에 개정판이 나왔다. 입독을 강추하는 바이다.

이 책은 서안지구를 찾아가 주인공을 통해 팔레스타인 역사를 한국 독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 간다.

《아! 팔레스타인》은 시온주의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유대인 국가 건설을 위해 “유럽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려 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영국과 손잡았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고, 아랍인들의 저항을 탄압하며 시온주의자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1948년 시온주의자들은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등에 업고” 건국을 향한 전쟁을 시작하며, 인종 청소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1948년 이스라엘이 파괴한 마을은 418개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70퍼센트인 294개는 완전히 파괴되고 22퍼센트인 90개의 마을은 크게 파손되었다.”

《아! 팔레스타인》은 1948년 인종 청소부터 2008~2009년 가자 침공까지 이스라엘이 벌인 침략과 학살을 연대기순으로 폭로한다.

1948년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이 겪은 곤란도 소개한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한 해에 난민 한 명당 13달러밖에 지출하지 못했는데, “이 수치는 사실상 고기나 채소, 과일을 전혀 먹지 않고 산다는 뜻이었다. … 1967년 이후 기부금이 부족해지면서 이 액수는 더욱 줄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자위권” 운운하며 이스라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다. 이스라엘은 비폭력 저항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1967년 7월, 일부 명사들은 간디의 시민 불복종 전술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였고 체포하여 동예루살렘에서 추방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저항하며 돌을 던지면, 이스라엘은 탱크로 무장한 군대로 보복했다.

《아!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탄압이 거세지면서, 몇몇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들이 무장 투쟁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한다.

1987~1993년 인티파다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난민촌을 중심으로 수만 명



팔레스타인 역사의 변곡점이 된 1987~1993년 인티파다

의 시위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하는 투쟁을 벌였다.

“1936~1939년 사이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인들의 반제국주의, 반시오니즘 운동의 역사가 되살아난 것이다.”

인티파다에 충격받은 이스라엘은 잔인하게 대응했다. “이스라엘 군에 의해 수만 명이 부상당하고 1070여 명이 살해되었는데 이 중 17세 미만이 237명이었다.”

그럼에도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자, 1993년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오슬로 협정을 맺었다.

《아! 팔레스타인》은 오슬로 협정에 대해 비판적이다. 처음부터 이 협정은 인티파다를 끝낼 “거대한 떡밥”이었다.

이 협정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과 관련해 단 한마디도 없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점령지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오슬로 협정 이후 가중된 빈곤, 도로 봉쇄, 점령촌 확대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가 쌓여” 결국 2000년에 두 번째 인티파다가 분출했다.

그리고 오슬로 협정에 대해 처음부터 비판적이었던 하마스가 2006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서방은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몰았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자들을 표적 살해한 데 이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마스를 지지한 대가”를 물었다. 2006년 가자지구를 대규모로 공습하고 침공했고, 지금까지 이어진 가자지구 봉쇄를 시작했다.

《아!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핵심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점령이 끝나야 팔레스타인 땅에서 평화와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의할 점도 있다

《아!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 쓴 만화책이고, 광범한 대중이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도서이다.

그럼에도 약간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과거 유럽에서 벌어진 유대인 박해의 명분을 별 비판 없이 소개한다. 가령 중세에 유대인은 “고리대금업자”로 일해 “대중의 마음속에 착취자로 각인”됐고 “선민사상이 낳은 유대민족의 우월의식[은] … 타민족에게 배척당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당대 현실의 일면(‘유대인 문제’의 물질적 토대, 즉 그들이 처한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이용해 만들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허구적 편견이다.

로비의 역할?

물론 작가는 유대인 혐오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가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들을 동일시하지 않고 있음은 책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주로 극우가 편견을 이용해 유대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현실의 상이한 유대인들을 정형화하는 주장은 팔레스타인 연대에 도움이 안 된다.

둘째, 《아! 팔레스타인》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배경에 ‘이스라엘 로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극우의 유대인 혐오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 위험이 있다.

“미국의 유대인은 정치, 경제, 금융, 학계,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아! 팔레스타인 ①②

원혜진 지음

바이북스, 196·198쪽, 각권 19,000원

미국의 대중동 정책 기조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설정한 범주를 넘지 않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이스라엘 로비와 압력”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스라엘 측의 로비가 왜 유독 미국 권력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미국 지배계급은 단지 로비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제국주의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 반항하는 중동 국가들을 응징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이 1967년 중동 전쟁에서 입증하자, 미국은 이스라엘 지원을 크게 늘렸다.

석유가 나는 중동을 지배하려면 미국은 현지에 이스라엘 같은 믿음직한 동맹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영향력과 이해관계를 지키는 경비견 노릇을 하며, 그 대가로 미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 왔다.

따라서 미국 제국주의의 이스라엘 지원이 로비 덕분이라는 주장은 상황을 거꾸로 보는 것이다.

셋째, 《아! 팔레스타인》은 2012~2013년에 연재된 만화인데도 당시 아랍 혁명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아랍 혁명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핵심 쟁점의 하나였는데도 말이다.

작가가 팔레스타인 해방과 아랍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 사이의 관계를 간과한 듯하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이스라엘에 맞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 11면으로 이어짐

미국 등 서방이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에 불을 붙이다

다라 커미스키

미국과 영국이 중동에서 더 광범한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끔찍한 제국주의적 살육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 월요일 영국 보수당 국방장관 그랜트 셉스는 영국이 예멘의 후티를 향한 공습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해에서는 화물선들이 후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150년 전 영국 제국의 살인 마들과 마찬가지로, 셉스는 영국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셉스는 영국 군함이 12월 홍해에서 공격용 드론으로 의심되는 것을 격추시켰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추가 행동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지난 일요일(12월 31일)에 미 해군은 후티 측 배 세 척을 파괴했고, 홍해에서 화물선에 오르려 하던 이들을 최소 10명 살해했다.

인근의 미군 군함에서 출동한 헬기가 작은 배들을 향해 발포했다. 그 배들이 화물선 ‘머스크 항저우’를 공격했다고 미국은 주장했다. 미국은 그 일대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거대 해운회사들의 이윤을 지키려고 12월 국제 해상 작전을 개시했다.

후티가 행동에 나서고 있는 지역은 홍해와 인도양 사이에 있는 바브엘만데브다. 이 좁은 해협은 세계 석유 해운망에서 세 번째로 물동량이 많은 병목이다. 매일 600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이곳을 지나고, 주되게 유럽을 향한다.

평균적인 배의 경우, 바브엘만데브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는 항로를 택할 때보다 9일 정도 단축된다. 더 저렴하기도 하다. 해운 전문가들은 짧은 항로를 택할

경우 운송비를 최소 15퍼센트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한다.

제국주의자들 전쟁 위협도 후티를 겁먹게 하지 못했다. 후티의 지도자인 압둘말릭 바드루딘 알후티는 예멘이 조금이라도 공격받으면 미 군함을 겨냥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주 연설에서 알후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만약 미국이 사태를 고조시키고 우리 나라를 겨냥하는 아둔함을 실천할 경향을 보인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1월, 후티는 이스라엘이 소유하거나 운용 중인 선박이 홍해에 들어오면 모두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봉쇄된 가자지구로 이스라엘이 식량과 연료 반입을 허용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석유 해운망의 병목

알후티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점령군이 잔혹한 봉쇄와 기아 사태를 이어 가고, 의약품이 민간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만행을 벌이는 데서 미국이 “시온주의 지지자들”로서 능동적 구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지난주 이스라엘은 시리아 알레포에 있는 이란 군사 거점에 공습을 퍼부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거점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한편,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은 서방 군대의 대변자가 되려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가 “지속가능한 휴전”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캐머런이 대변하는 것은 대량 학살이다.

▶ 10면에서 이어짐

후원하는 제국주의 열강, 그리고 그 열강과 손잡은 아랍 정권들과 반드시 맞서야 함을 뜻한다. 즉, 중동의 기존 질서와 대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아

랍 세계에서 벌어지는 근본적 사회 격변의 일부가 돼야 비로소 성공할 가능성이 생긴다.

2011~2013년 아랍 혁명, 특히 이집트 혁명은 팔레스타인인들이 해방될 가능성을 활짝 보여 줬다. 반대로 이후

에 벌어진 반혁명 은 이스라엘 지배자들을 안도하게 만들었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아! 팔레스타인》은 오슬로 협정을 비판하지만, 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루지는 않는다. 두 국가 방안을 현실

적 대안으로 계속 추구해야 할까? 아니면 한 국가 방안, 곧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 1970년대 이전에 추구했던 단일하고 세속적인 민주 국가 건설을 추구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가 공백으로 남아 있다.



미군 등의 후티 공격은 끔찍한 대규모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반공민군

후티가 싸우는 상대는 누구인가?

후티는 자이디스라고 불리는 예멘의 시아파 소수 교파 무슬림 사이에서 비뚤한 단체다. 후티라는 그들의 명칭은 그 운동의 창립자 후세인 알후티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단체는 1990년대에 당시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의 부패에 맞서기 위해 창립됐다.

대통령 살레는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의 지원 아래 2003년 후티 반군을 격멸하려고 했지만, 후티는 이 둘을 모두 물리쳤다. 후티는 2023년 11월 19일 이래로 국제 상선 24척을 공격했다(미국 중부사령부 발표).

2015년 1월 예멘 수도 사나를 접수한 후티 반군은, 서방이 지원한 대통령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를 퇴진시켰다. 그 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이 개입해 예멘에서 잔혹한 전쟁이 벌어졌다. 그 연합군을 무장시킨 것은 영국 등이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초까지 그 전쟁으로 37만 7000명이 사망하고 400만 명이 피난민이 됐다. ‘무기 거래 반대 캠페인’(CAAT)은 이렇게 지적한다.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의 하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멘을 폭격 중인 연합군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가담하고 있는데, 영국은 UAE의 주요 무기 공급처이기도 합니다.”

예멘에서 쓰이는 무기 중 영국이 만든

것에는 타이푼 전투기와 토네이도 전투기, 페이브웨이 유도 폭탄, 브림스톤 미사일, 스톰 새도 미사일 등이 있다고 ‘무기 거래 반대 캠페인’은 덧붙였다. 2015년 3월 폭격이 시작된 이래,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수출 허가가 난 무기의 가치는 97억 파운드(약 16조 원)로 공표됐다.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것만 82억 파운드(14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무기 거래 반대 캠페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한 무기의 실제 가치가 거의 270억 파운드(45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서방이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계획과도 부합한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선이 여럿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일곱 전선에서 공격받고 있다. 가자, 레바논, 시리아, 유다·사마리아(서안지구), 이라크, 예멘, 이란에서다.

“제한적 충돌의 시대는 끝났다. 수년간 우리는 제한적 충돌이 관리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움직여 왔는데, 이제 그런 현상은 사라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여러 전장이 수렴하는 현상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끔찍한 대규모 전쟁이 지금 어른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추동하는 세력은 미국과 영국이다.

출처 Dáire Cumiskey, ‘West ignites yet more war in the Middle East’ (2024. 1. 01) / 번역 김중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급속히 기운 노동계급 정당들

연말부터 총선 국면 분위기가 완연했다. 한동훈의 등장에도 여권 인사들의 표정에 그늘이 짙다.

정권 심판 정서가 완화된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위해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정서가 다수다. 주요 언론들이 발표하는 신년 여론조사 결과들도 대동소이하다.

윤석열은 1월 1일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지난해 신년사에 이어) 다시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주요 개악 의제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윤석열의 노골적인 부자 대변 행보와 우익 본색,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가 대중의 반감을 키웠는데, 정작 윤석열의 친기업주 개악은 더딘 것이다.

청년들의 불만이 실제로는 크다는 것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여파 속 교사 운동에서도 드러났다.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다가 등 돌린 것도 대부분 청년층이다.

윤석열의 우익 본색도 전임 우파 정부들과 비교해 별로 공포를 자아내고 있지 못하다.

한편, 이낙연의 신당론이 언론의 호들갑과 달리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조차 별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도 그가 개혁 염원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개혁 염원과 기업주들의 이윤 보호 사이에서 눈치 보며 줄타기를 하기 때문에 개혁 염원 대중 속에서도 민주당을 못 미더워한다. 물론 이들도 더 나은 대안이 보이지 않으면 선거에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다. 좌파의 정치적 존재감은 최근 더 약해졌다.

정치적 위기 속에도 윤석열은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위한 각종 개악과,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정치적 역압을 늘릴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윤석열 정부와 만만찮은 격돌을 벌여야 한다. 윤석열에게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 대담하게 싸워야 한다.

선거제와 민주당

12월 28일 “진보 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정치의 도약을 위한 22대 총선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표와 의석은 진정한 대안이 될 급진적 대중 운동 건설 과제를 대신할 수 없다

이 네 당 사이에서 선거연합 방안이 두 개나 경쟁하고 있고 4인4색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4당은 이미 서로 거절한 상대의 선거연합 방안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재론하자고 말했다.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때문이다. 현재 의석이 소수이거나 없는 좌파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바라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공개로 ‘지역별 병립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으로 하면, 정의당조차 3석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반정부 정서가 큰데도 진보·좌파 측이 약진은커녕 의회 진출이 사상 최악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진보 4당은 필사적으로 연합을 모색하고 있다. 혼자로는 민주당을 압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보 4당의 공동 대응은 일단 민주당을 압박해 진보4당과 협상에 나서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앞서는’ 얘기도 나왔다. 사실상 지역구와 비례 모두 국민의힘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역구는 협상으로 단일화하고, 비례 연합 정당을 창당해 민주당과 진보정당 모두 참가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4년 전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확대한 버전이다.

주로 진보당 계열이나 진보계 원로들에게서 나오는 얘기다.

선거제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병립제에 미련을 두는 게 의석 상실에 대한 걱정 때문이므로, 민주당이 의석을 잃지 않으면서 진보정당들도 의석을 늘릴 방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혁 염원 대중의 기대가 이제

명 민주당 대표에게 많이 쏠려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안보 위기 국면에서 민주당이 지배계급의 눈치를 보면서, 특히 진보당과 선거연합하는 것은 피하려고 할 것이므로 진보당 측의 기회주의가 더 도드라지는 것이다. (정의당은 비례연합에 반대하고 있지만, 지역구 연합은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결국 좌파 전반에서 ‘전략적 야권연대(계급을 가로질러 형성되는 국민 연합)’로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 과정에서 선거제 대응 말고는 어떤 투쟁적 의제나 가치 또는 운동 건설 과제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역학 관계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인민전선)이 윤석열을 패퇴시키고 좌파 정당들에 더 많은 의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면 개혁 염원 대중의 사기가 오를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좌파도 선거연합(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표와 의석은 진정한 대안이 될 급진적 대중 운동 건설 과제를 대신할 수 없다.

2016년 총선에서 암묵적 연대를 한 민주당과 반박근혜 야당들에게 박근혜 정부는 참패했다. 박근혜 정부와 지배계급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공공부문부터 시작된 노동개악 저지 투쟁들이 확산돼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민주당’이라는 동맹을 의식해 당시의 반정부 투쟁이 너무 커지고 급진화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

한했던 점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계급투쟁과 만날까 봐,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철도 파업을 3번의 설득 실패 끝에 종료시켰다. 그 압력은 우파(새누리당 소속 탄핵 지지 의원들)가 민주당에게, 민주당 주류가 당내 개혁파에게, 민주당 개혁파가 정의당에게, 정의당이 철도노조 집행부와 민주노총 집행부에게 전달했다.

이런 민중주의(진보 포퓰리즘) 전략은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다. 박근혜를 대체한 문재인 정부는 속히 정치 안정을 이루고 적폐 청산 등을 적당히 해 대중을 달래고(그래서 중단시키고), 박근혜가 실패한 임금체계 개편이나 경쟁력 강화 정책들을 재추진하라는 압박을 사용자들에게서 받고 있었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의 배신에 맞서 정부에 맞선 대중 저항을 건설하지 않았다. 정부를 옹호하거나, 개별 투쟁들이 부문의 장벽을 넘어서 전면화되지 못하게 제한했다.

그 결과, 대중의 자체 행동이 줄고, 실용주의가 득세하고, 지난 2년여간 운동 안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좌파의 정치적 존재감이 하강했다. 대중의 자체 운동이 활발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만으로 개혁이 이뤄지는 게 아닌 것이다. 지금도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대정부 연대 투쟁을 의욕적으로 건설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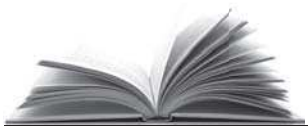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위기이고, 대중의 개혁 염원은 선거를 기다리며 수동적 상태이긴 해도 식지 않았다. 그러나 좌파는 취약하고,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얻을 공산이 크다.

이런 세력관계 속에선 어쩌면 민주당과 좌파 간 선거연합이 표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복합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민주당은 곧 운동을 단속하라는 지배계급의 압력을 개혁주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 구실을 할 것이다.

결국 최대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노동계급을 일정 수준 밑으로 자제시키려 들 것이다.

선거도 무시할 순 없지만 아래로부터의 운동들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연대를 투쟁 목적으로 보편화하는 것이 비할 데 없이 중요하다.

김문성



서평 |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미중 대결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나침반

“시진핑 3연임의 의미를 강대국들의 국제적 경쟁의 맥락에서 짚어 주셔서 이해하기 좋았다.”

“시진핑 체제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 좀 공포물처럼 다루는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이 강연은 그렇지 않아]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 책의 바탕이 된 동명의 유튜브 시리즈 강연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다. 시진핑 3연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관한 책이 넘쳐나지만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책만의 차별성을 잘 보여 준다.

많은 논평가와 학자들은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이 달라졌다면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이나 민족주의적 야망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 국가들 중 중국의 지배자들은 유독 나쁘다는 식의 관점은 “공포물” 같은 메시지로 이어지곤 한다.

반면 이 책을 집필한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이정구 객원연구원(중국 경제 전공)은 시진핑이 집권할 즈음 중국 안팎의 변화에 더 주목한다.

2011년에 미국 정부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천명하며 아시아로의 개입을 크게 늘렸는데 그 본질은 중국 견제였다. 중국 안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 건수가 부쩍 늘었다.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과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한 중국 지배계급은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에 대응하는 실천이 강경한 외교 노선과 강화된 국내 억압인 것이다.

이렇게 중국이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과 벌이는 경쟁 관계를 중심에 두면, 중국 지배자들의 처신을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다. 반대로 이런 맥락을 보지 못하면 중국을 기이한 전체주의 사회라고 여겨 서방이 더 낫다는 잘못된 결론에 빠질 수 있다.

위 내용은 이 책의 7~9장에 해당하는데, 국제적 경쟁의 맥락 속에서 중국을 설명한다는 이 책의 핵심 방법론을 시진핑 정부에 적용한 것이다. 이 방법론을 1949년 중국 건국 이후의 모든 시기에 적용한 것이 책의 전반부 내용이다.

마오쩌둥이 중국을 건국할 당시 중국은 최빈국 중 하나였음에도 미국과 소련 모두의 견제 대상이었다. 이 책 3장에서는 마오쩌둥 체제가 확립될 때 소련과의 갈등, 미국의 군사적 위협, 국내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이



중국 항공모함을 견제하고 있는 미해군의 모습. 가운데 보이는 것은 중국 항공모함이다

런 국내외의 압력에 대응해 “마오쩌둥은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해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본 축적에 성공해야 했다.”

당시 중국에서 노동계급은 전혀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마오쩌둥은 오히려 중국공산당이 1920년대 말에 노동계급 기반을 완전히 잃은 뒤에 부상해서 권력을 잡았다(1, 2장).

이로부터 이 책의 핵심적 주장이 제시된다.

“국가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면서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하고 그 잉여가치로 더욱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체제가 바로 1949년 이후의 중국이다. 이때 국가 관료는 국가, 즉 엥겔스가 말한 “집합적 자본”의 인격체로 나타난다. 이런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변형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마오쩌둥 시기의 문화혁명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1989년 톈안먼(천안문) 항쟁을 분석한다. 특히 톈안먼 항쟁은 중국 노동계급이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에서 벗어나 가장 멀리까지 나아간 경우였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은 항상 “톈안먼 항쟁의 유령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많이 제시돼 생생함을 더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중국에서 노동자·농민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계급적대가 한시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노동계급이 국가의 주인이고 계급 적대가 없다’

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에야 계급 갈등이 생겼다’는 좌파 다수의 관점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이런 차이는 학술적 과거사 논쟁이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갈수록 위험해지는 현실을 헤쳐나가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대만 문제, 홍콩인들의 항쟁, 위구르와 티베트 등 소수민족의 저항을 다룬다. 중국 여성들이 겪는 차별도 다룬다.

미국은 중국과 대결하면서 이런 쟁점들을 언제든지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물론 중국도 미국의 경제력 쇠락과 지정학적 위기를 한껏 이용하려고 한다.)

일부 좌파처럼 중국을 모종의 진보적 사회 혹은 사회주의로 보면 미국 등 서방과의 대결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것으로 기을 공산이 크다. 그러면 중국이 서방에 맞설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중국에서 벌어지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지지하지 않거나 못 본 체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2019~2020년 홍콩에서 송환법과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항쟁이 크게 일어났을 때 국내 좌파 다수는 침묵했고, 일부는 대응했지만 무척 굵고 미온적이었다. 심지어 일부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중국이 자본주의의 한 변형이고 서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회라고 볼 때에만, 이런 지정학적 대결의 한 가운데에서도 중국 내 계급투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계급의 잠재력에 기초한 반제국주의적 대안 제시가 가능해진다.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이정구 지음, 책갈피, 232쪽, 13000원

예컨대, 이 책은 현재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대만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에 모두 반대할 대안으로 중국 노동계급과 대만 노동계급의 연대를 제시한다. 대만의 노동계급·좌파는 중국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나뉘어서는 안 되고, 미국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 모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2019~2020년 홍콩 항쟁과 관련해서는 중국 본토 노동계급과 홍콩 노동계급의 진정한 이해관계는 서로 연대하는 것에 있고, 당시 항쟁은 결코 ‘홍콩인 대 대륙 중국인의 대결’이 아니었다고 논증한다.

중국 소수민족 문제의 경우, 한쪽 노동자들이 위구르와 티베트 등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89년 톈안먼 항쟁이나 2022년 11월 전국적 ‘백지 시위’에서 실제로 그런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 준 고무적 사례도 제시된다. 한쪽 대중과 소수민족의 연대와 단결 투쟁이 중국에서 진정한 사회주의를 성취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데도 밑거름이 될 것이다.

끝으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알아야 할”이라는 이 책의 제목이 가장 들어맞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만 바꾸려 해도 중국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에게 마지막 장은 아주 귀중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트로츠키주의 혁명가들의 이야기이다. 이들의 경험과 오류는 오늘날 중국 혁명가들과 연대를 건설하고 한국에서 국제주의적 실천을 하고자 할 때 나침반 구실을 할 것이다.

김종환



서평 |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전략 부재의 도전

정진희

여성학 연구자 정희진의 신간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 한국 사회 성정치학의 쟁점들》(교양인)이 최근 나왔다.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대중화됐지만, 근래에는 페미니즘의 일부 과도함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성평등 정책도 후퇴하는 상황이다. 페미니즘 내 균열도 커졌다. 정희진은 이런 상황에 불안감을 드러내며 성차별을 부정하는 주장들을 비판하고 페미니즘 내부도 겨냥해 논쟁을 제기한다.

저자는 옳게도 성소수자나 난민 반대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을 기본적인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에 반대하는 페미니즘에 대해 “여성주의가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구별하고 배제에 앞장선다면, 그런 여성주의가 왜 필요할까” 하고 묻는다. 일부 페미니스트의 ‘난민 반대’에도 “자본주의의 절대 지배 속에서 누가 더 약자이고 더 고통받는가를 경쟁하는 비극의 정치일 뿐”이라고 꼬집는다. “난민과 성폭력을 연결하는 사고는 무지 혹은 의도된 오식(誤識)”이라며 “서구가 비서구 사회의 야만성을 부각하

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성의 ‘열악한’ 인권 이미지를 활용해 왔음”을 지적하는데, 맞는 지적이다.

정희진은 ‘피해자 중심주의’ 논리도 비판한다.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나왔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런 현실을 바꾸는 개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저자는 여성이 단일한 경험을 하는 집단이 아니고 여성의 경험과 인식은 각자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피해를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여기며 피해자 정체성으로 여성운동을 하는 것에 난점이 있다고 본다. 여성의 경험이 다 다른데, 피해자 중심주의는 규범적 피해자 상에 근거하기에, 그 논리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저자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 개념에 담긴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험이 ‘객관적’이라고 인정받기 힘든데, 피해자 정체성에 기반한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는 페미니즘이 진진하기 힘들다고 보아 피해자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듯하다.

“여성의 말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는 수용되기 힘든 반면, 남성들 사이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상황을 의식하는 것이다.

정희진은 2005년에 낸 《페미니즘의 도전》에서도 이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 중심주의 논리가 더 힘을 얻는 듯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낸다.

그런데 ‘피해자 중심주의’ 논리에 담긴 주관주의를 비판하지 않고서는 이 개념이 낳는 문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고 대안 제시도 힘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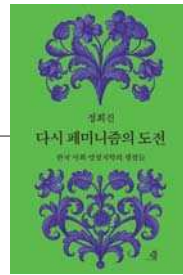
주관주의

한국의 페미니즘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협소한 법률의 성폭력 규정과 보수적 인식에 반발해 등장했다. 하지만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의 가해자 명단 공개 이후 널리 확산된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건의 객관적 실체와 피해 호소 여성의 인식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여성의 인식과 감정을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했다. 이렇게 성폭력 개념이 주관주의적이게 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여성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논리로 사용

돼 왔고, 그 결과 많은 혼란을 낳고 갈등을 키워왔다.

성폭력 사건에서 물증만이 아니라 여성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피해 호소를 진중하게 경청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피해 호소만으로 성폭력이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여성의 피해 호소가 거짓이거나 과장됐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키우게 된다. 2000년대 들어 피해자 중심주의가 여성운동과 좌파들 사이에 널리 수용되면서, 실제로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 피해자 중심주의-2차 가해 개념을 악용해 단체나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여성의 피해 호소를 무조건 진실로 간주하는 논리는 우파에 이용되기도 쉽다. 지난 대선에서 우파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사건의 실체가 불분명한 ‘박원순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했다. 여성의 구조적 불평등을 부정하는 우파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무기로 사용한 것은 위선의 극치였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를 수용한 페미니스트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혼란을 부추겼다.



포스트구조주의 페미니즘의 한계

정희진은 페미니즘이 정체성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여긴다. 여성이 단일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여성 간 차이를 강조하고, 젠더가 “계급, 인종, 연령, 지역 등 다른 사회 모순과 결합”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는 페미니즘이 남녀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여러 형태의 차별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정희진은 여성 차별이 계급과 인종 차별 등과 결합된다고 할 뿐, 상이한 형태의 차별이 왜, 어떻게 결합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여성 차별의 근원과 차별이 유지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없기에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전략도 제시하지 못한다.

정희진은 성별 환원론에는 비판적이지만,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개념은 “계승”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권력관계”라고 본다. 남성 내

부에 계급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남성은 여성 지배에서 같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정희진의 책 어디에도 남성이 왜 그런 권력을 갖게 됐는지, 자본주의에서 그것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남성 간 현격한 계급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연대할 수 있다면, 그 기초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냥 남성이 권력을 가졌다고 간주하며 ‘남성 문화’와 ‘남성 언어’가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지 묘사한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개념은 초역사적 개념으로, 여성 차별이 인류 역사의 보편적 특징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실제 인류 역사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인류 역사 대부분을 이루는 무계급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없었다. 이는 많은 인

▶ 15면으로 이어짐

학교폭력의 사법화 심화시키는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배이상현 광주 도덕교사

올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대화를 나눠 봤다. 나와 얘기를 나눈 교사들은 학폭조사관제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는데, 내 생각도 그렇다.

학폭조사관제도가 퇴직 경찰과 교원의 공공근로를 확대하는 고용 효과는 있을지언정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전문성과 교육적 전문성이 발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고용 조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배움터지킴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한시적 단기 인력일 것이라 추정된다.

사법화의 형식은 힘을 탈 것이나 집행은 매우 형식적일 것이다. 기관 간 업무 협조의 세부적 과제는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다. 현장과 학부모의 추가적 불만과 민원이 누증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추가적 보수작업이 실제적 문제 해결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되어 정책 담론을 휘발시킬 것이다.

조사관이 교육지원청에 위치함으로써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폭 신고가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전해지는 상황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때에도 조사관이 초기 조사를 스스로 할 것인지,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매뉴얼이 주먹구구로 집행될 것이다. 학폭조사관은 학교 현장에 대한 총체적 책임성이 부재한 관계로 잘못된 학폭 사무는 부실한 행정 매뉴얼을 자기의 변명거리로 삼을 것이고 책임 회피성 논란이 꼬리를 물 것이다.

교육지원청의 행정은 학폭조사관을



학교 밖 전담 조사관은 여러 행정적 문제를 유발하고, 학교 공동체 교육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관리 지원할 뿐, 학폭조사관들과 학교 공동체 갈등 관리 및 생활교육의 관점에서 학폭에 대한 질적 의사소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결국 학폭조사관제도의 집행에 급급하노라 교육행정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학폭의 사법화를 위한 식민지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다.

교사들에게 보강 조사 업무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도 구체적 업무 협조 관련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매우 혼란스런 상황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단위의 업무협조방식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한 뒤탈을 막기 위해 장학사나 상담사가 학폭조

사관을 지원하는 사무에 동원된다면 이는 결국 행정의 옥상옥처럼 중복행정을 유발시킬 것이니 꽤나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학교현장의 입장에서는 학교현장은 학폭사무의 외주화로 학폭 관련 조사 및 생활교육적 책무감이 약해질 것이고, 기존의 학교교육의 생활교육전통이나 공동체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고민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질 것이다. 결국 학폭조사관제도는 기존의 학교 역할을 떠맡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교육은 부실해지고 슬림해질 것이며, 청소년의 시민교육은 무너질 것이다.

2012년 학폭법 제정 이후 정부는 학폭 관련 생활교육의 사법화를 해결방

식으로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평가의 기회를 갖지 않은 채로 시기시기 들춰지는 문제에 대한 대응요법에 급급하여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누증시키고 있음이 학폭조사관제도의 밑바닥 본질이다.

학폭의 사법 처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교의 공동체 시민교육의 가치와 기능, 그 전통 및 교사전문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시스템으로 학폭의 사법화는 꺾어져야 할 것이다. 단지 학폭의 건수를 줄이는 것만을 목표로 공동체 갈등의 사법화를 유일한 원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교사의 업무가 줄어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계속 공수표로 남발하지만 그 실효성은 미뤄지면서 혼란스럽고 복잡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인지, 부분적으로 보완 수정하면 예정된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부는 판단하지 못할 것이며, 사실은 판단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 정책에 대한 우려의 핵심 지점이다. 교육부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며 전신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실효성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학폭조사관제도에 대한 반응은 매우 피상적이기만 하다. 어쩌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주체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겁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다. 그들은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키는 추상적 언급을 남기는 수준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대립지점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 14면에서 이어짐

류학과 고고학 연구가 입증한 것이다. 남성이 여성을 언제나 지배한다는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삶이 변화해 온 것도 설명할 수 없다.

정희진은 포스트구조주의 사상을 수용해 남성 지배와 권력 관계가 곳곳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상은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 보지 않고 다원적인 것으로 본다.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집단적 주체는 없고, 개개인들의 국지적 실천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정희진

의 책에서는 정체성 정치를 대체하는 해방의 전략은 전혀 제시되지 못한다.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은 광범한 사회변화를 위한 투쟁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들의 사고를 바꾸는 것에 국한된다.

정희진은 담론을 중심으로 차별을 분석하는데, 이런 접근법은 차별이 생겨나는 원인을 이해하는 데는 난점이 있다. 관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기초가 있다. 여성과 성소수자 차별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착취와

특히 가족제도에 물질적 기초가 있다. 가족제도는 자본주의에서 착취가 지속되는 데 중요한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실을 한다. 보수적 성 관념은 지배계급이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대중을 분열시켜 지배하고자 퍼뜨리는 것이다.

정희진은 많은 사회 이론처럼 계급을 여러 불평등의 하나로 여길 뿐,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사회관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계급이 각종 차별이 뿌리 내린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

는 지배계급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계급투쟁의 수준이 낮은 시기에 노동계급의 힘은 많은 사람에게 인식되기 힘들다. 하지만 혁명적 투쟁이 분출하는 시기에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의 권력에 도전하며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거듭 보여 줬다. 계급을 자본주의 사회 분석의 핵심에 놓지 않으면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전략을 찾지 못하게 된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 실은 대법원 판결 이를 호재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

지난해 12월 25일 대법원 2부는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유연화(비용 절감)할 수 있게 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판결은 12월 7일 시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그래서 통상 법정 근로시간제를 주 52시간제라고 부른다. 해당 규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일별 연장근로를 총합산한 것이 1주 1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법 위반 유무를 판단해 왔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1주 근로시간의 총합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을 넘기는 것이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표와 같은 사례에서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4일간의 연장근로 시간(아랫줄) 총합이 17.5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 재판부는 1주 총근로시간이 49.5시간이므로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았으며 (49.5시간 - 40시간 = 연장근로 9.5시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고 역지를 부린 것이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는 게 초과 근로임을 법 조항으로 꼭 명문화해야 알 일인가?

그래서 해당 재판부도 같은 판결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스스로 앞뒤 안 맞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의 판결과 정부 부처의 행정해석에 기준을 제공한다.

어불성설

아니나다를까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시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개악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연장근로 시간 제한 산정 단위기간을 1주에서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에게 크나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본지는 2022년 12월부터 노동시간 유연화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서 중요한 이슈임을 지적해 왔다. 그 개악의 핵심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해 몰아치기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주 5일을 근무하지 않는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정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21.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몰아치기 노동을 손쉽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 감독 결과를 보면, 감독 대상인 돌봄 업종, 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사업장의 10퍼센트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사용

노동자 A씨의 1주 근로시간
(대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실제 사례를 표로 재구성)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일 근로시간		12h	11.5h	14.5h			11.5h
1일 연장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 8h)		4h	3.5h	6.5h			3.5h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연장근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여기에 연장근로 단위기간까지 확대되면 사용자들은 초과 수당이나 신규 채용 같은 임금비용 부담을 덜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사용자의 필요에 종속돼 관리되는 장시간·집중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입법

민주노총·한국노총·정의당·진보당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추진을 비판했다.

모두 1일 연장근로 시간 제한 규정 미비를 보완할 입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시작하고 있다.

1일 연장근로 시간 제한 규정 등 노동자에게 이로운 보완 입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보완 입법만으로 법의 빈틈을 악용한(교묘한 법 위반, 이를 눈 감아 주는 판결, 솜방망이 처벌 등) 사용

자, 정부, 사법부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까?

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사례에서 보듯, 윤석열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핑계로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수용 가능'한 안으로 후퇴시킬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지만, 기업주들의 최우선 민원 중 하나인 노동시간 유연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강화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노동운동 측이 입법을 위한 의회 책략을 중심에 놓으면 개혁의 진정한 동력인 노동자 대중 투쟁을 부차화하기 마련이다. 개혁 입법 성취 또는 개악 저지를 이를 진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민주당을 활용하는) 입법 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맞선 투쟁을 지금부터 조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김광일 노동자연대 회원, 공인노무사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58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이슬람주의(정치적 이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



1월 17일(수) 오후 8시

발제 시문 아사프

레바논 마르크스주의자로 현재 영국에서 활동. 레바논의 좌파 언론 '알만수르'와 '퍼블릭 소스'의 편집위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참가신청
bit.ly/0117-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